

# 이재명, '통합대통령'으로 중도·보수층 공략...野 단일화 맞대응

국민내각으로 통합정부 구성 발표  
총리 국회 추천, 총리 각료 추천권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하기도

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 정치개혁 의제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위성정당으로) 피해를 본 정당들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이어 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도 잇따라 참배했다. 최근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과 중도·보수 원로와 연쇄 회동한 데 나아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역까지 찾아가 보았다.

그동안 이들 두 전직 대통령 참배에 부정적이었던 이 후보는 이날 참배 이유에 대해 "공은 기리고 과는 질책하되,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개인의 선호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에 비판적인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와 행보를 잇달아 선보인 배경에는 전남 안 후보의 전격 제안으로 불붙은 단일화 논의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여파로 친문 지지층이 결집,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으나 단일화 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 흐름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정부를 유능하게 이끌 책임자라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정권 교체론에



이재명 후보, 서울상의 부회장단과 기념 촬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 제인 정책대화를 마친 뒤 서울상의 부회장단 및 주요 회원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단 단일화와 대비를 이루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회견에서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 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윤·안 후보의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 된다면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불안감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안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한을 윤 후보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견제'를 거듭 날리는 모습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없애고 공수처 독점적 지위 폐지

윤석열표 사법개혁안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검찰 권한 분산에 역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정권 교체 시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꺼낸 정책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공약으로,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에 대한 대수술도 예고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공수처 폐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문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영호남 변호사 472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임선숙 변호사 등 부산서 기자회견

임선숙 변호사 등 영·호남 지역 변호사 472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지 기자회견에는 강행욱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임선숙 전 지방변호사회장(광주·전남), 김영복 전 지방변호사회장(전북),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 윤인선 전 지방변호사회 부회장(울산), 김태업 변호사(울산), 김무락 변호사(대구), 박미혜 변호사(경남), 권진성·김경지 변호사(부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

령의 변호사로서의 고향인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화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책임자임을 확인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제20대 대통령은 식견과 능력, 포용적 리더십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화합의 지도자, 무엇보다 실력과 실적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1800만 영·호남 사·도민들에게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20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즉시 수사를 가장한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진보당 민점기 후보, 전남지사 첫 예비후보 등록

진보당 민점기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4일 "수십 년 동안 가진 사람에게 편중된 정책을 펴온 '민주당 독점 지방정치' 폐해를 바로잡겠다. 전남도민의 맘이 빛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1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대혁명, 노동 중심 도정, 청년이 머무는 전남, 부동산 개혁, 기후에너지 일등 전남 등 5대 핵심사업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농업 정책과 관련해 임기 내 청년 농민 10만명 육성, 월 50만원 농민수당,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소멸 위기의 농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노동국을 신설하고 전 도민 고용보험제, 최저임금 실효 부조 2년, 청년구직자 특별실업부조 등 전남형 노동복지 3중 세트 시행 등 노동 중심 도정으로 인구 절반인 노동자 도민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양보' 없다는 安...마이웨이 행보하며尹 결단 촉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단일화의 공을 넘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측이 이점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 문제를 두고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답은 안주뿐"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당분간 공식선거운동에 집중하며 윤 후보의 답변을 압박한다는 태세여서 수

일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14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의 양보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나 사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100% 여론조

사' 단일화 제안에도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으로서도 단일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룰 경우 정권교체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태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막판 '극적 담판'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당 차원에서는 대선 이후 뒤따르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